

CONTENTS

2016 가을호 Vol. 42호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이명선

실무위원
김난주, 김소영, 박복순, 박수범,
안상수, 이인선, 황정임

편집인
문미경

기획 및 편집
이동선

디자인 및 인쇄
(주)서보미디어
TEL: 02)2253-7800

젠더리뷰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필자의 소속기관
이나 본원의 공식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002 편집자의 글

기획특집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정책

- 004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확장 | 홍승아
- 012 한국의 무자녀 부부가족: 현황과 가족정책적 함의 | 최인희·김은지·이상림
- 022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정정책적 지원 방향 | 장민선

이슈브리프

- 030 조부모 영아양육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 유희정
- 03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 김수완·송효진

국제리뷰

- 044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정책 현황 및 관련 최신 동향 파악 | 한진영
- 049 호주의 성주류화 정책 현황 및 성인지예산 관련
최신 동향 파악 | 이택면

정책현장탐방

- 058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꿈꾸다
: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센터

국내외 여성 이슈

- 064 국내외 여성 이슈
- 069 KWDI 동정

원고투고 및 정기구독 안내

- 076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 077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 078 GSPR 원고투고 안내
- 07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 080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기획특집

가을 호 기획특집은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정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무자녀 가족은 앞으로 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 형태 중 하나로 다양한 함의를 가진 집단입니다. 무자녀 가족과 유자녀 가족의 차이를 분석하고, 무자녀 부부가족 생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은 다양성 증가, 가족의 개인화와 탈제도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7%로 주된 가구 유형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과 여성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마련 등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슈브리프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조부모들의 양육활동 지원에 따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조부모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크레딧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국제리뷰

선진국에서의 성인지 통계 현황과 호주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웨덴은 성인지 통계와 여성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1994년 조례에 “특별하고, 모순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개인과 관련된 공식 통계는 성별로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모든 공식적 통계가 성별로 수집, 편집, 제시된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호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에 대한 비판 및 감시를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예산 서류보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대안적 예산 분석의 형태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호주의 성주류화 정책 현황과 성인지예산제도의 연혁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현장탐방

가을호 정책현장탐방은 2015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는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등 4개 사업 영역에 대해 필수사업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센터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획특집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정책

-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확장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무자녀 부부가족 : 현황과 가족정책적 함의

최인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정정책 지원 방향

장민선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확장¹⁾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우리사회 가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40여년 간 한국사회가 경험한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등의 압축적인 변동 못지않게 진행되었던 것이 가족의 변화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가구 원수는 2.53명이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27.2%로 가장 큰 비중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2인가구(26.1%)로 나타났다. 이제 얼마 안지나 부부가 두 자녀를 키우는 핵가족의 모습은 또 하나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가족가치와 가족관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형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이른바 “표준화된 생애주기”에 벗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사실 가족의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미 만혼과 만산, 결혼율과 출산율의 감소, 무자녀가족의 증가,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족의 증가, 비전통적인 파트너십(동거 등)의 증가, 비혼출산(births outside marriage)의 증가 등이 진행되고 있다(OECD, 2012: 28~29).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가족변화에 따라 가족의 정의와 가족문화가 변화되고 가족정책 역시 대상과 범주, 접근법도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통적 가족, 정형적 가족의 모습 외

1) 이 글은 홍승아·최인희·최진희·유은경 (2016).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의 일부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는 가족의 경계와 범주가 확장되고, 가족정책의 스펙트럼 역시 확장되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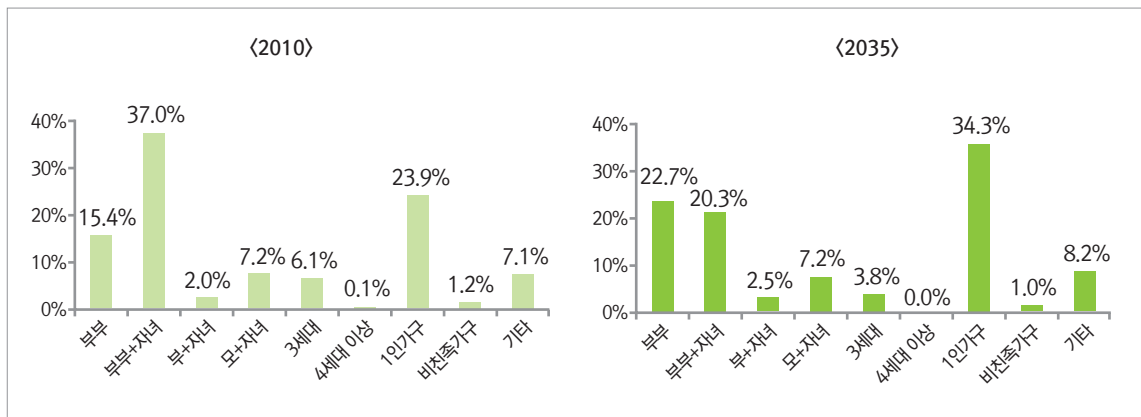
2. 가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가족 다양성 증가

지금까지 전형적인 가족모델로 생각되고 있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변화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27.2%로 가장 큰 비중을 구성

하고 다음으로 2인가구(26.1%)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으로 이제 얼마 안지나 부부가 두자녀를 키우는 핵가족의 모습은 또하나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가족규모의 축소가 우리사회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기준 주요국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중국 2.97명, 미국 2.54명, 일본 2.42명, 영국 2.30명, 독일 2.00명 등(통계청, 2016) 가구규모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2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확실하게 예측된다. 불과 5년 전인 2010년만 하더라도 전체 가구의 구성은 “부부+자녀가구”가 3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23.9%), 부부가구(15.4%)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2035년에는 1인가구(34.3%), 부부가구(22.7%), 다음으로 “부부+자녀가구”가 20.3%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그림 1] 가구유형별 가구비율 변화

가구형태의 다양화 뿐 아니라 가구구성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지난 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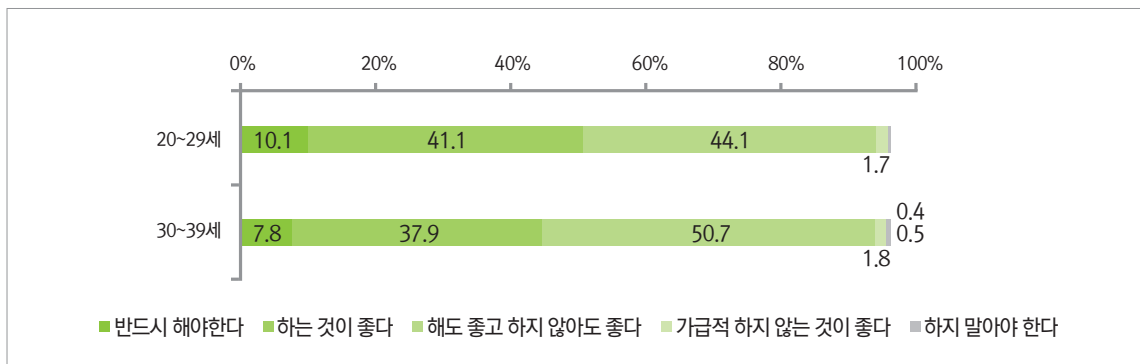
간 증가추세였으며,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2000년 7.8%에서 2010년 9.2%, 2020년 9.7%로 전망된다(홍승아외, 2015: 52). 또한 다문화가족

은 2007년 328,000명에서 2015년 818,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혼인건수 중 다문화가족 결혼의 비중은 2008년 11.2%, 2014년 8.0%수준이다. 한편,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1993년 전체 혼인 중 1.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전체 혼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재혼의 경우 1990년에는 전체 혼인 중 재혼의 비율이 10.7%였으나 2015년 현재 21.4%로, 즉 전체 혼인 중의 약 1/5 이 재혼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한국가족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위 “정형가족”외에도 다양한 가족구성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 가족구성의 자연과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형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생애에서 교육과 훈련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결혼이나 출산의 공식은 깨지고 있다. 결혼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구성 역시 미루어지거나 포기되거나 거절되는 등 이른바 “표준화된 생애주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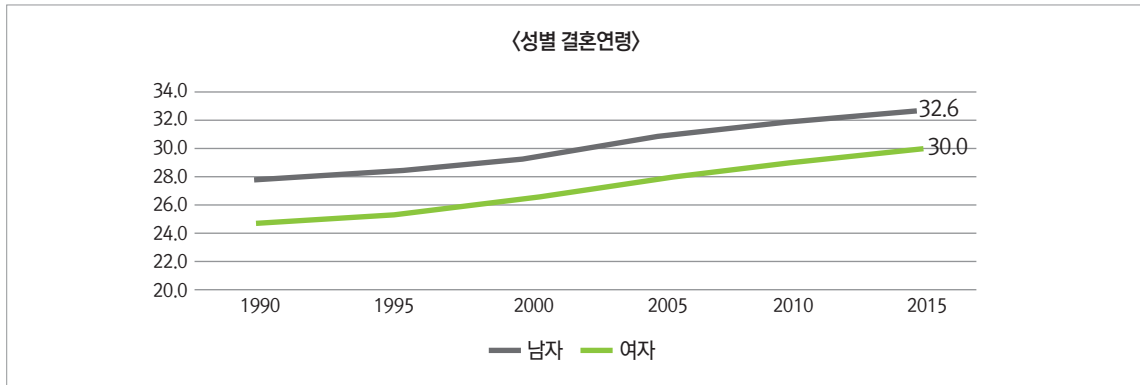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4)

[그림 2]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

우선,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이다. 우리사회 결혼당위성에 대한 동의도는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결혼 당사자가 될 20대나 30대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는 더욱 소극적이다. 예컨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도는 20대가 10.1%, 30대가 7.8%로 매우 낮다. 즉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에는 평균 결혼연령이 남성 29.3세, 여성 26.5세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남녀 모두 “30대 결혼”연령시대로 접어들었다(통계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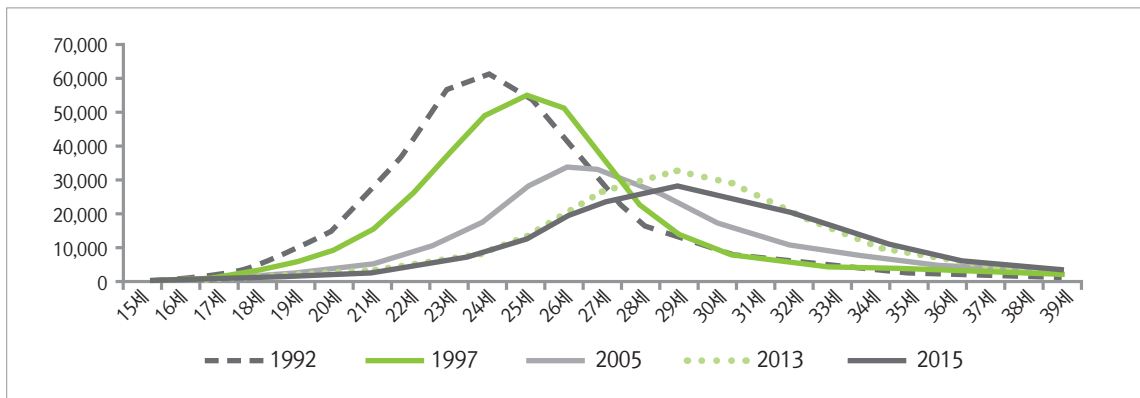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해당연도

[그림 3] 성별 결혼연령의 변화추이

특히 최근 들어 청년세대에 있어서 결혼으로의 진입, 가족의 구성이 “가족부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혼과 가족구성

방식,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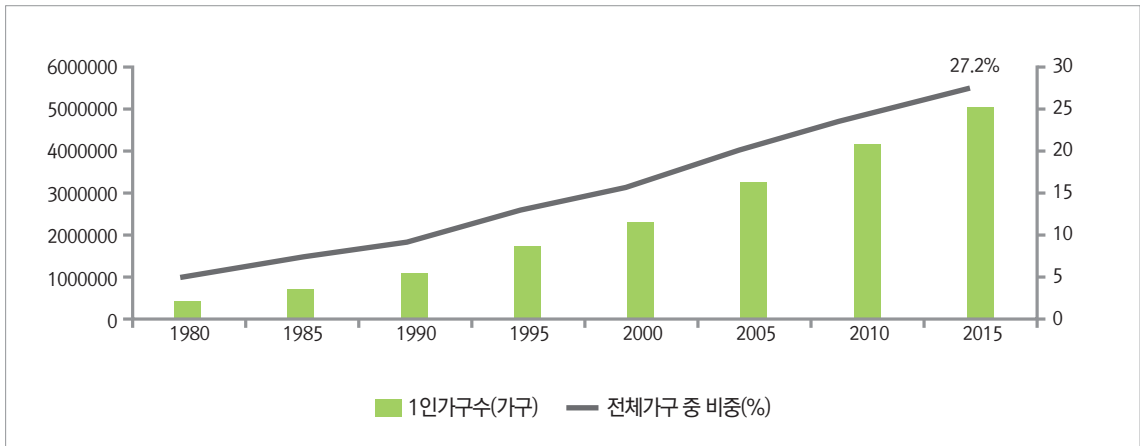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4] 가임기 여성의 혼인연령별 혼인 건수(1992, 1997, 2005, 2013, 2015)

실제로 가임기 여성의 혼인연령별 혼인건수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혼인율은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대와 30대 혼인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2년 가장 많은 혼

인건수를 기록한 연령은 24세로, 해당연령 여성의 혼인건수는 61,414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26세(33,367건), 2013년 29세(33,053건), 2015년 29세(28,136건)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5] 1인가구의 증가추이(1980~2010)

3) 가족의 개인화와 탈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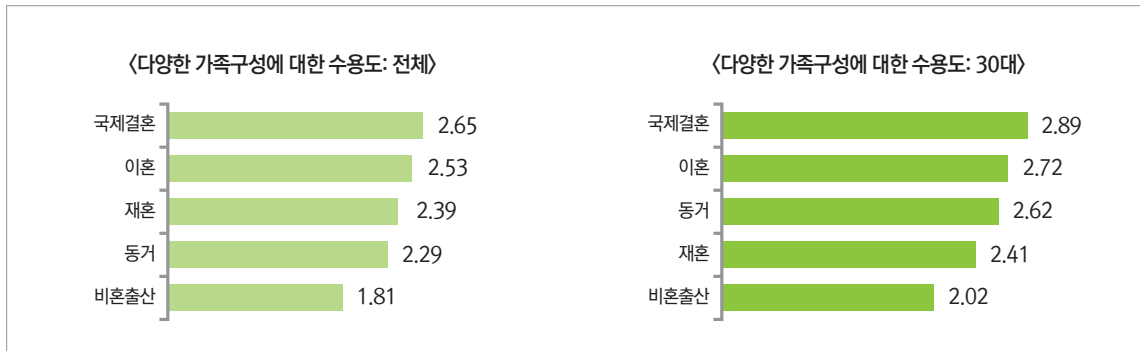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이다. 1980년에는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4.8%, 1990년 6.9%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전체 가구 중 27.2%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통계청, 2016) 가족의 변화 중에서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정책적 대상이 되고 있다. 주요국가의 1인가구 비율도 미국 28.0%, 영국 28.5%, 일본 32.7%, 노르웨이 37.9% 등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6).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대가 18.3%, 70세 이상이 17.5%, 20대가 17.0%로, 20대와 30대가 1/3 이상을 구성한다(통계청, 2016). 특히 노인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달리 젊은 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현상은 새로운 가족정책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1인가구의 증가현상은 가족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화란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서 벗어나 가족형성 및 해체의 방법과 시기, 친밀성의 대상과 내용, 라

이프스타일 등 생애과정의 중요한 결정들을 개인이 선택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이라는 제도로서의 가족이 주는 의무와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개인적인 생활을 지향한다. 이들이 원하는 관계는 가족이라는 제도가 주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친밀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친밀한 관계 등이 될 것이다.

4) 가족 가치관의 변화

이같이 가족구성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가족 가치관에 있어서도 결혼, 이혼, 재혼, 국제결혼, 동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구성 중 일반국민의 수용도는 국제결혼, 이혼, 재혼, 동거, 비혼 출산(births outside marriage)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용도가 나타났다. 한편, 30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국민 전체에 비해 각 유형별 가족구성에 대한 수용도는 더 높게 나



주: 4점척도로 평균하였음(점수가 높을수록 허용도 높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4

[그림 6] 가족구성에 대한 태도 비교(2014)

타났으며,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 역시 중간 이상의 수용도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변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사회문화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정책과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내, 가족간 구성과 변화 역시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구조 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족의 삶에도 고스란히 침투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다 안정적인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정책 역시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여 목표와 대상의 확대와 조정이 필요하다.

세대변화에 따른 가족변화를 수용하고 가족구성원의 형태와 방식의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정책의 범주 역시 자녀양육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가족소득

보장 등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새로운 가족문화와 가족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혈연이나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의 가족정의와 개념을 넘어서서 새롭게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변화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미혼과 만혼이 증가하고,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재생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결혼과 출산과 자녀양육이 개인의 부담이 되고 개인의 삶을 펼치는데 제약을 주지 않도록 매 과정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가족의 변화 속에 저출산의 문제 역시 뿌리를 두고 있다. 단계 단계에 얽혀있는 다양한 실태대들을 풀어나갈 때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역시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으로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대안적인 결혼

형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전환하는 노력일 수도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가족 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주도적인 가족구조와 가족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구조와 가족 규범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북유럽에서는 결혼을 대신하는 하나의 제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되어 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동거가족을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도입하여 동거커플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였고, 영국에서는 2005년 시민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동거를 한 커플에게는 결혼한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부담스러워 하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이들 국가에서는 동거가족이 자녀를 출산한 후에 결혼으로 이전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셋째, 포용적 가족관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가족변화를 정책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시차(time lag)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적 대응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사회문화의 조성, 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가족변화에 대응하여 표준가족모델, 보편적 가족모델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의 틀을 넘어서서 가족정의와 가족정책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 1인가구, 동거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해 나가며 동시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교육, 홍보,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법률혼, 혈연중심의 정상가족 외에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성장과 사회화 과정에서도 확대된 가족개념에 따른 포용적인 태도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표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포용적 가족관 관련 내용

포용적 가족관 형성

- 가족형태 다양성 수용을 위한 논의기구 운영 및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및 정책개발
-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 가족의 미래 변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인식개선, 차별사례 발굴·시정,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

자료: 관계부처합동(2015), p. 92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가족형

태에 상관없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42, 50-52, 관계부처합동, 2015: 92).

〈표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가족관련 내용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강화

-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 현실화와 학업·육아 병행 여건 조성
- 비혼·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입양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p. 4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과 학업·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비혼·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며, 입양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문제는 이들 다양한 가족의 권리가 보호되고 관련 사회정책들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의 보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가족변화 담론과 미래지향적 가족정책을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사회적 논의의 장(場)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가족정책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참 · 고 · 문 · 헌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6). 2015 전국인구주택총조사.

홍승아·최진희·진미정·김수진 (2015).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최진희·최진희·유은경 (2016).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eck, U & Beck-Gernsheim, E.(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N.Y.: Sage.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Paris: OECD.

OECD (2012).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Paris: OECD.

한국의 무자녀 부부가족 : 현황과 가족정책적 함의¹⁾

●
●
●
●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I. 연구배경

가족규모 및 형태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이념형적 핵가족(부부+미혼자녀)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정형가족인 부부가구는 1990년 9.3%에서 2010년 20.6%로 증가하는 등(통계청 홈페이지, 2016) 가구 구성형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가족 관련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예: 가구유형 변화추이, 가구형태 변화 국제비교 등)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비정형가족의 실태 및 내부 다양성을 다룬 상당수의 국내 연구는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문제’, ‘결핍’ 등 부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으며, 비정형가족의 생활세계를 가족사회학, 젠더의 관점에서 면밀히 조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된 상태이다.

무자녀 부부가족은 앞으로 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형태 중 하나이자 젠더 관점에서는 재생산과 관련된 이슈, 가족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가족가치관 및 의식변화, 노후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함의를 가진 집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무자녀 부부가족 규모 추정 및 유자녀 가족과의 차이 분석을 수행하고, 무자녀 부부가족의 생활세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자녀 부부가족에 대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¹⁾ 이 글은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본과제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최인희·김은지·이상림·정다은, 2015) 보고서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요약한 것임.

〈표 1〉 무자녀 부부에 대한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
2000, 2005,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 만 30세 이상 여성 중, 출산경험이 없고 조사시점 현재 혼인상태가 '유배우' 인 여성 - 자녀를 입양하였거나, 현재 남편의 이전 혼인(또는 동거)에서 낳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
2009,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만 30세 이상 49세 이하 응답자 중, 부부 모두 초혼이며, 조사 시점까지 출산 경험이 없고, 현재 임신 중이 아닌 응답자 - 이들 응답자 중 앞으로 추가 출산 의향 없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만 '선택적 무자녀' 부부로 정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 만 30세 이상 45세 미만 여성 및 그 배우자이면서, 현재 혼인상태가 '유배우' 인 자 - 이들 중 가구 내 동거하는 자녀, 분거한 미혼 자녀가 없는 사례를 무자녀 부부로 정의
심층면접 조사	- 혼인기간 3년 이상, 35세 이상 출산경험 없고, 현재 자녀가 없는(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없는) 경우를 무자녀 부부로 정의

II. 연구방법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무자녀 부부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무자녀 부부가구의 비율 및 변화 추세 파악, 무자녀 기혼자와 유자녀 기혼자의 특성 비교를 위해 〈2000, 2005,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통계청, 2000, 2005, 2010), 〈2009,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 외, 2009, 2012), 〈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5) 등 표본 대표성이 확보된 2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결혼기간 3년 이상, 35세 이상 기혼자 중 출산경험이 없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없는 여성 및 남성 총 30인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III. 주요 연구결과

: 한국 무자녀 부부가족 현황 및 생활세계

1) 무자녀 부부비율 분포

〈2000, 2005,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통계청, 2000, 2005, 2010)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40대 이후의 무자녀 부부 비율은 지난 10년간 다소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당 연령 내 전체 여성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연령별 혼인 및 유자녀 비율 분포 추이(여성)

(단위: 천 명, %)

	만 30-34세	만 35-39세	만 40-44세	만 45-49세	만 50-54세	만 55-59세	만 60-64세	만 65세 이상
2000년 (N)	1,988.1	2,044.6	1,969.0	1,446.5	1,147.8	1,021.0	959.6	2,110.0
자녀있음	83.7	92.6	94.8	96.2	97.3	97.5	98	97.4
무자녀 기혼	5.7	2.6	2.0	1.4	1.0	0.8	0.5	0.3
미혼	10.2	4.3	2.5	1.6	1.0	0.7	0.6	0.3
기타 무자녀	0.4	0.5	0.6	0.7	0.8	1.0	0.9	2.0
2005년 (N)	1,890.8	1,937.6	1,936.7	1,901.8	1,430.0	1,181.7	1,073.1	2,994.7
자녀있음	72.4	88.6	93.4	95	95.9	96.6	96.9	95.8
무자녀 기혼	8.9	3.5	2.3	2.0	1.5	1.3	1.0	0.6
미혼	18.3	7.3	3.5	2.3	1.7	1.1	0.7	0.4
기타 무자녀	0.4	0.6	0.8	0.7	0.9	1.0	1.3	3.2
2010년 (N)	1,846.8	2,039.5	2,060.8	2,039.6	1,896.2	1,405.0	1,115.8	3,100.5
자녀있음	63.6	84.3	91.6	94.7	95.8	96.7	97.4	97.9
무자녀 기혼	7.7	3.2	1.8	1.5	1.3	1.0	0.7	0.4
미혼	28.5	12.1	6.1	3.3	2.4	1.7	1.2	0.6
기타 무자녀	0.2	0.4	0.5	0.5	0.6	0.7	0.7	1.1

주: N = 전체인구로 환산한 인구

자료: 통계청(2000, 2005, 2010). 「2000, 2005,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2) 무자녀 부부 혼인 안정성

무자녀 기혼 집단의 경우 전체적 생잔율이 유자녀 기혼 집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생잔율 차이는 이혼율의 차이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무자녀 부부의 안정성이 유자녀 기혼자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을 시

사한다.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무자녀 부부가족은 ‘자녀 없음’이 혼인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혼인 안정성에 대한 불안은 여성 연구참여자들 가운데서 더 빈번히 언급되었다.

〈표 3〉 연령별 기혼여성의 유자녀/무자녀 인구규모 및 비율 분포 추이(여성)

(단위: 천 명, %)

	만 30-34세	만 35-39세	만 40-44세	만 45-49세	만 50-54세	만 55-59세	만 60-64세
유자녀 기혼							
2000년 (천명)	1,663.7	1,893.9	1,867.5	1,392.0	1,116.5		
2010년 (천명)			1,888.6	1,930.6	1,816.9	1,358.6	1,086.9
코호트 생잔율(%)			113.5	101.9	97.3	97.6	97.3
무자녀 기혼							
2000년 (천명)	113.7	53.1	40.2	20.7	11.2		
2010년 (천명)			36.9	31.1	24.0	13.8	7.8
코호트 생잔율(%)			32.5	58.5	59.8	66.9	70.3

자료: 통계청(2000, 2010). 「200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3) 무자녀 부부(부인) 특성 비교 :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통계청, 2010) 자료를 분석하여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특성을 유자녀 기혼여성들과 비교한 결과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 집단에서 대학 이상 학력 비율이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들은 30대

에서는 비교 집단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지만 30대 후반에는 30대 초반에 비해 유자녀 기혼여성과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40대부터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 유자녀 기혼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50대 초반까지 그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혼여성의 연령별 대학 이상 학력 및 경제활동 참여 비율 분포(2010)

(단위: %)

		만 30-34세	만 35-39세	만 40-44세	만 45-49세	만 50-54세	만 55-59세
대학이상 학력분포	선택적 무자녀	60.8	35.9	28.6	21.6	12.2	9.9
	미출산 기혼	76.5	56	44.1	34.7	-	-
	유자녀 기혼	66.6	52.4	40.8	28.3	16.7	11.8
경제활동 참여	선택적 무자녀	69.1	62.4	55.8	55.9	48.6	44.5
	미출산 기혼	65.2	52	58.6	63.8	-	-
	유자녀 기혼	44.8	51.7	60.4	61.5	55.9	47.7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한편, 〈2009,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 외, 2009, 2012) 자료를 이용하여 무자녀 부부의 특성을 다른 유형의 부부들과 비교하고,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무자녀 이유와 가족 및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선택적 무자녀 부부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은 다른 유형의 부부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0대와 40대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40대 선택적 무자녀 부부 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을 반영하듯, 이들 집단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응답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5〉 부부유형별 경제적 특성

		전체	만 30-39세	만 40-49세
월 가구소득 분포 (단위: 만원)	선택적 무자녀	318.19	329.6	311.77
	미출산 기혼	365.56	372.0	317.38
	유자녀 부부	402.47	382.8	419.72
		F = 16.386 ***	F = 2.426†	F = 14.337 ***
경제적 자립 인식 ¹⁾ (단위: %)	선택적 무자녀	18.6	15.0	20.5
	미출산 기혼	9.1	7.1	24.3
	유자녀 부부	12.3	10.8	13.6
		$\chi^2 = 7.12 *$	$\chi^2 = 4.629 *$	$\chi^2 = 6.447 *$

1)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비율의 합

주: †p<.10, *p<.05, **p<.01, ***p<.001

자료: 김승권 외(2009,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4) 무자녀 부부(부인) 특성 비교 : 가족 관련 가치관

결혼에 대한 인식 및 자녀 관련 가치관에 있어서도 부부유형별 차이가 나타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편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이 30대와 40대 각각 37.5%, 41.1%로 다른 유형의 응답자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비율은 유자녀 부부, 미출산 부부, 선택적 무자녀 부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부유형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단위: %)

	유형	만 30-39세	만 40-49세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¹⁾	선택적 무자녀	37.5	41.1
	미출산 부부	65.2	70.3
	유자녀 부부	53.8	58.7
		$\chi^2 = 24.090 ***$	$\chi^2 = 18.306$
결혼 이후 자녀의 필요성 ²⁾	선택적 무자녀	50.0	44.4
	미출산 부부	78.9	78.6
	유자녀 부부	83.4	86.3

1)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 응답비율의 합

2)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응답비율의 합

주: †p<.10, *p<.05, **p<.01, ***p<.001

자료: 김승권 외(2009,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한편, 심층면접에서는 무자녀 부부가족 형성 동기가 개인적 가치관 보다는 만혼, 난임, 자녀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등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자녀출산은 여전히 부부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이행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유동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출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도달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자녀 없음'이 이후 부부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형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회귀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무자녀 부부(부인) 특성 비교 : 가족생활

〈2009,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 외, 2009, 2012)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부부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0대 선택적 무자녀 부부는 다른 유형의 부부, 특히 유자녀 부부에 비해 남편의 가사 분담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만족도의 경우 30대에서는 선택적 무자녀 부부(부인)의 부부 생활 만족도가 68.8%로 유자녀 부부의 부부

생활만족도 67.5%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지만, 미출산 부부의 85.8%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대에서는 선택적 무자녀 부부의 만족한다는 응답이 50.0%로, 미출산 부부(61.5%)는 물론, 유자녀 부부(59.3%)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자녀 부부들은 무자녀 부부에 비해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와 40대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7〉 부부의 유형별 양육과 가사 분담 형태

(단위: %)

		만 30~39세	만 40~49세
가사분담 정도 ¹⁾	선택적 무자녀	81.3	85.7
	미출산 부부	76.8	88.5
	유자녀 부부	89.3	92.5
생활 만족도 ²⁾	선택적 무자녀	68.8	50.0
	미출산 부부	85.8	61.5
	유자녀 부부	67.5	59.3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³⁾	선택적 무자녀	61.1	47.2
	미출산 부부	66.8	57.1
	유자녀 부부	48.7	39.8

1) '전적으로 부인이 함과' 주로 아내가 하고 남편이 도움' 응답비율의 합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 '매우 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럽다' 응답비율의 합

자료: 김승권 외(2009, 2012). 「2009,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3) '매우 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럽다' 응답비율의 합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당수의 무자녀 부부가족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부간 갈등을 경험할 필요가 없고, 가사노동 총량이 많지 않으며, 일·가정양립 갈등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간 갈등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또한, 부부중심의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진술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화하거나 여가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편함을 진술했으며, 상당수의 연구참여자가 무자녀 부부가족이 '자녀 없음'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소외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6) 무자녀 부부(부인) 특성 비교

: 생활시간 이용 및 만족도

마지막으로 <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5) 자료를 이용하여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생활시간 이용 행태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자녀

유무에 따라 시간사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자녀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경우 자녀가 없을 경우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족 유형별·성별 시간사용 및 성별차이

(단위: 시간/일)

시간사용		남성		여성		차이 ¹⁾	
		유자녀 (N=4,861)	무자녀 (N=465)	유자녀 (N=4,861)	무자녀 (N=465)	유자녀 (N=4,861)	무자녀 (N=465)
개인 유지	평균	11.2	11.2	11.1	11.6	0.1	-0.4
	통계치	$t=0.742$ $df=5324$ 평균차이=0.0676		$t=-4.905$ *** $df=541.451$ 평균차이=-0.455		$t=5.322$ *** $df=5324$ 평균차이=0.523	
일	평균	7.5	7.5	2.7	4.6	4.8	3.0
	통계치	$t=-0.040$ $df=5324$ 평균차이=-0.008		$t=-8.261$ *** $df=527.596$ 평균차이=-1.818		$t=7.400$ *** $df=5324$ 평균차이=1.809	
학습	평균	0.1	0.1	b 0.1	0.2	0.0	-0.2
	통계치	$t=0.101$ $df=5324$ 평균차이=0.003		$t=-3.149$ ** $df=491.487$ 평균차이=-0.163		$t=2.592$ * $df=502.800$ 평균차이=0.167	
가사 노동	평균	0.5	0.7	3.6	2.8	-3.1	-2.1
	통계치	$t=-1.972$ * $df=535.519$ 평균차이=-0.112		$t=8.106$ *** $df=541.649$ 평균차이=0.858		$t=-9.294$ * $df=5324$ 평균차이=0.167	
돌봄 노동	평균	0.6	0.1	2.4	0.1	-1.8	0.0
	통계치	$t=17.961$ *** $df=1043.459$ 평균차이=.468		$t=63.723$ *** $df=4913.759$ 평균차이=2.331		$t=-43.468$ *** $df=2670.035$ 평균차이=-1.864	
여가	평균	4.0	4.4	4.0	4.8	0.0	-0.3
	통계치	$t=17.961$ ** $df=1043.459$ 평균차이=-0.418		$t=-5.412$ *** $df=525.581$ 평균차이=-0.752		$t=2.007$ * $df=526.478$ 평균차이=0.335	

주: 부부 중 (남성의 시간-여성의 시간), 값이 +일수록 남성 집중, -일수록 여성 집중

주: †p<.10, *p<.05, **p<.01, ***p<.001

자료: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재분석

또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경우 시간부족, 피곤함, 가사노동분담 만족도에서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유자녀 여성이 무자녀 여성보다 시간부족과 피곤함,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불만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족 유형별·성별 시간부족, 피곤함, 가사분담 만족도

(단위: 점)

시간사용		남성		여성	
		유자녀 (N=4,861)	무자녀 (N=465)	유자녀 (N=4,861)	무자녀 (N=465)
시간부족 ¹⁾	평균	1.81	1.79	2.01	2.22
	통계치	$t=0.373$ $df=5324$ 평균차이=0.014		$t=-4.476^{***}$ $df=530.392$ 평균차이=-0.213	
피곤함 정도 ²⁾	평균	1.67	1.67	1.77	1.86
	통계치	$t=0.085$ $df=5324$ 평균차이=0.003		$t=-2.452^{*}$ $df=521.912$ 평균차이=-0.087	
가사분담 만족도 ³⁾	평균	2.53	2.47	2.99	2.72
	통계치	$t=1.387$ $df=543.154$ 평균차이=0.062		$t=4.972^{***}$ $df=554.501$ 평균차이=0.268	

1) 점수가 낮을수록 시간부족을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함(①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②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③ 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④ 항상 여유있다고 느낌).

2) 점수가 낮을수록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함(① 매우 피곤함, ② 조금 피곤함, ③ 거의 피곤하지 않음, ④ 전혀 피곤하지 않음).

3)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재분석

한편 시간사용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유자녀 여성들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와 시간사용 만족도는 오히려 무자녀 여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자녀 여성들이 시간

부족과 피곤을 느끼고 가사노동분담에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족 유형별·성별 시간사용 및 삶의 질 만족도

(단위: 점)

		남성		여성	
		유자녀 (N=4,861)	무자녀 (N=465)	유자녀 (N=4,861)	무자녀 (N=465)
시간사용 만족도	평균	2.83	2.95	2.80	2.97
	통계치	$t=-2.996^{**}$ $df=5324$ 평균차이=-0.121		$t=-4.204^{***}$ $df=5324$ 평균차이=-0.170	
삶의 질 만족도	평균	2.73	2.85	2.66	2.84
	통계치	$t=-2.791^{**}$ $df=5324$ 평균차이=-0.124		$t=-3.926^{***}$ $df=5324$ 평균차이=-0.172	

주: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재분석

IV.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주요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녀 부부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5) 분석 결과와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무자녀 부부는 유자녀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자녀 부부가 비자발형 또는 연기형 무자녀 부부이기 때문일 수 있고, 혹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더라도 사회적으로 낮은 수용성 때문에 무자녀 부부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저출산’이 위기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무자녀 부부가족에게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암묵적인 사회적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형태와 가족생활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무자녀 부부가족 또한 다양한 삶의 조건들 속에서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의 해법은 무자녀 부부에게 가해지는 암묵적인 사회적 압력보다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 무자녀 부부가족의 상당수는 불임, 건강상의 문제로 무자녀 부부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난임시술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나 난임부부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최근 정부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에게 제공되었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를 추가 지원(‘16.9월 ~ ‘17.9월, ‘17.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하며, 연간 3

일의 난임 휴가(무급)를 도입(‘17.7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8.24.). 따라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난임시술의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도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무자녀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00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통계청, 2000, 2010) 분석결과 무자녀 부부가족의 혼인 안전성이 유자녀 기혼자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심층면접에서도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부부간 소원함 및 갈등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교육은 ‘부모교육’과 유자녀 부부가족 형태를 전제로 설계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자녀 부부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무자녀 부부가족도 부부간 갈등, 이혼 위기 등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참 · 고 · 문 · 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8.24.). “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히 추진한다.”

통계청 홈페이지(2016). e-나라지표: 가족의 형태별 분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6
(검색일: 2016년 9월 2일).

분 · 석 · 자 · 료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종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00).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통계청.

통계청(2005).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통계청.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통계청.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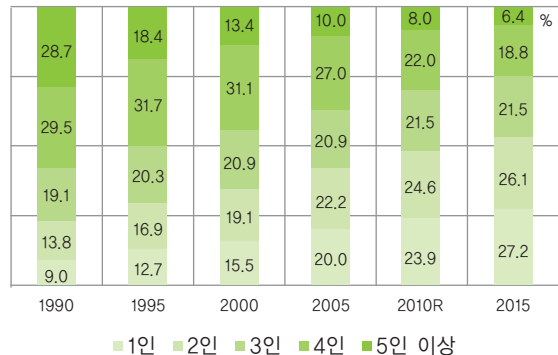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정책적 지원 방향¹⁾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인가구는 520만 가구로 지난 2010년의 421만 가구보다 약 100만 여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로써 전체 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15년 27.2%에 해당함으로써,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이 되기에 이르렀다.



출처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집계결과 보도자료(2016. 9. 7), 그림 21

[그림 1] 가구원수 규모(1990^T~2015^R)

1인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성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곤을 경험하기 쉽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인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

¹⁾ 이 글은 필자가 2015년 기고한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이화젠 더법학 제7권 제2호, 2015)을 최근 통계를 반영하여 재구성, 정리한 것이다.

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저출산 정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과 배치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애에 걸쳐 누구든지 1인가구가 될 수 있고,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남성과 다른 정책적 수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대응에 있어서 성별특수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성 1인가구 중에서도 20~30대와 60대 이상이 처한 현실이 다르고 그에 따른 정책 수요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에 있어서는 연령별 접근을 해야 한다. 즉,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

는 취업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60대 이상의 여성 1인가구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여성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해서 연령별 정책 수요를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립 및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현행 법제에 존재하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차별의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2. 여성 1인가구의 현황과 문제점

가. 여성 1인가구의 현황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인가구 421만 가구 중 여성 1인가구는 212만여명으

〈표 1〉 성별 1인가구의 연령(2010^R~2015^R)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0년 ^R				2015년 ^R			
	일반 가구	1인가구			일반 가구	1인가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 계	17,656 (100.0)	4,218 (100.0)	2,094 (100.0)	2,124 (100.0)	19,111 (100.0)	5,203 (100.0)	2,593 (100.0)	2,610 (100.0)
20세미만	89 (0.5)	79 (1.9)	41 (2.0)	38 (1.8)	63 (0.3)	58 (1.1)	28 (1.1)	30 (1.1)
20~29세	1,405 (8.0)	845 (20.0)	467 (22.3)	378 (17.8)	1,288 (6.7)	887 (17.0)	485 (18.7)	402 (15.4)
30~39세	3,556 (20.1)	860 (20.4)	564 (26.9)	296 (13.9)	3,279 (17.2)	953 (18.3)	610 (23.5)	343 (13.1)
40~49세	4,604 (26.1)	694 (16.5)	434 (20.7)	260 (12.2)	4,552 (23.8)	850 (16.3)	542 (20.9)	308 (11.8)
50~59세	3,833 (21.7)	601 (14.2)	305 (14.6)	296 (13.9)	4,606 (24.1)	878 (16.9)	478 (18.4)	400 (15.3)
60~69세	2,342 (13.3)	493 (11.7)	162 (7.7)	331 (15.6)	2,827 (14.8)	668 (12.8)	262 (10.1)	407 (15.6)
70세이상	1,827 (10.3)	646 (15.3)	121 (5.8)	525 (24.7)	2,495 (13.1)	910 (17.5)	189 (7.3)	721 (27.6)

출처: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집계결과 보도자료(2016. 9. 7), 표 55

로서 약 53%를 차지했었으나,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520만 가구 중 여성은 261만 가구로서 50.2%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 비해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 1인가구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 1인가구가 56%에 달하는 곳(전남 55.9%)도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111만의 1인가구 중 여성 1인가구가 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30대가 18.3%, 70세이상 17.5%, 20대 17.0% 순으로 높게 나타나 30대가 1인가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였다(전체 연령 중 30대 1인가구가 23.5%) 그러나, 여성은 7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27.6%)로 나타나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여성 1인가구의 정책적 수요

1인가구는 공통의 욕구와 연령별로 특화된 욕구를 갖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²⁾ 첫째,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주거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빈번한 거주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의 안정과 편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인가구 거주자는 모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1인가구의 대부분은 낮은 사회참여율과 높은 질병률 및 우울도를 보이

고 있다. 이는 1인가구가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어 정신 건강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1인가구인 사람의 가족관계, 연령, 성별, 주거지역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정책적 과제가 다르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연령층이 낮은 경우에는 혼인으로 1인가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으로 갈수록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게 된다. 고령의 1인가구는 건강이 취약하고 취업 비중과 근로안정성이 모두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필수재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 식료품 가격 및 주거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크고 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젊은 층의 1인가구는 경제적 활동 및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문제가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여성 1인가구의 구체적인 삶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태조사에서 2030 세대와 4050 세대, 그리고 6080 세대는 1인가구가 된 이유와 혼자 사는 어려움 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세대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는 응답(61.5%)이 많았던 반면에, 4050세대와 6080세대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1인가구로 혼자 사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2030세대는 경제

2) 정경희 외,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55면.

3) 이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6. 9. 6.)를 요약한 것이다. 이 조사는 서울시 거주 20~80대 세대별 여성 1인가구 1,800명(2030세대 700명, 4050세대 500명, 6080세대 6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한달간 진행되었다고 한다.

적 불안감(26.6%)과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의 어려움(26.3%), 성폭력 범죄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19.5%)을 호소한 반면에, 4050세대는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의 어려움(27.4%)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불안감(23.8%)이 다음으로 나타났고, 6080세대는 약 40% 정도가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의 어려움을 응답했고, 외로움(23.8%)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정책 수요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2030 청년 여성 1인가구는 보증금있는 월세와 전세 점유비중이 높고, 약 74.2%가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으며, 약 40% 정도는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는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와 주거지 내부의 은닉장소 등으로 인해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주거의 안정성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050의 중장년 여성 1인가구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4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 이상이 외로움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반려동물과 살고 있거나 같이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6080의 노년 여성 1인가구는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크고, 30% 이상이 여전히 손자 등 가족 돌봄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나이 때문에(21.2%), 1인가구이기 때문에(20.5%)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 있다고 응답해서 노년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수립 시에는 이러한 연령별, 성별 수요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법정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3.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법정정책 대응 방안

가. 다인(多人) 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다인 가구 중심의 생활방식이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법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사회국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은 주로 가족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가구가 이로부터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생활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를 국가 법체계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다양한 권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1인가구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1인가구는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의해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보장,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도 다인가구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헌법상 가족제도의 보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없으면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나,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1인가구는 동법에 규정된 '건강한 가정'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해체 예방 의무를 부과한 것은 1인가구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내지 예방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에 따르면 1인가구는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된다.

한편,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1명당 5점씩 가점(총 35점 상한)을 부여하는 항목이 있어서 1인가구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5조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에 근거하여 보장되어야 할 주거의 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 모델에 근거하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는 전물량 방식에 따라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우선 산정한 뒤, 기타 가구유형에 대해서 OECD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산정되고 있어서 주거비 비중이 높고,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비 비중이 높다는 등의 1인가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건강한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가구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가구를 다양화하여 증가하는 독거노인과 청년층 1인가구 등에 대해 별도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거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까지 1인가구를 이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가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1인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는 이제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으며, 머지 않은 장래에는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1인가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1인가구를 법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1인가구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여성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

정부 차원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한 것은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행복주택⁵⁾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1인가구의 특성이나 연령별, 성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등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 1인가구 급증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과 여성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1인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에 초점을 두어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데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안전, 건강, 일자리, 커뮤니티, 불편해소의 5대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안전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여성안심택배서비스, 흠방범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⁶⁾ 또한 여성 독거노인에 특화된 건강, 돌봄, 안전, 일자리, 활동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4) 김영철 외,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1, 76~77쪽.

5)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형태이다. 서울의 20~34세 청년 1인가구의 주거형태는 보증부 월세(52.3%), 전세(27%), 무보증부 월세(9%)로 나타났다. 때문에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80%를 이들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 국민행복주택 브로셔, 2014, 3쪽, 5쪽.

6) 서울특별시(2012. 9. 13.), “서울시, 지자체 최초 ‘45만 여성 1인가구 삶’ 종합지원”(보도자료), (<http://spp.seoul.go.kr/trackback/tb/b/B0158/13792>)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여성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서 경제력이 취약하고, 근로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근로가 가능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근로가 불가능한 노인 1인가구들에게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근로가 가능한 청·장년층에게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는 것은 성별을 불문한 요청인 바, 여성 1인가구를 위해서는 고용 기회, 근로조건 보장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40~50대 중년 여성 1인가구는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1인가구가 된 경우가 많은 바, 소득활동에 종사했던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혼자 살고 있지만, 아직 돌보아야 할 자녀나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돌봄 지원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 적극적 구직 지원 정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여성 1인가구는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근로가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 수요를 고려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 1인가구의 주거권 보장에 있어서 이들의 주거 형태는 자가(自家)보다는 전, 월세인 경우가 많고, 생계비 부담 중 주거비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높은 임대료 부담 완화, 주택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세보조금(wohngeld)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높은 주거비용을 자신의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것으로서, 종래 가구원수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다가 최근에 1인가구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⁷⁾ 또한,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고,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가동 등 여성 1인가구의 주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여성안심주택 보급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서는 새로운 가족형태로서 '사회적 가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혼인이나 혈연, 입양에 의하지 않은 사회적 결합관계를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하여 1인가구도 공동주택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조례 자체에서 정책 입안시 여성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동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이 조례에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7)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 주택시장의 변화, KB daily 지식비타민, 2013, 3쪽.

4. 마치며

전체 가구의 1/4이상이 1인가구인 ‘1인가구 시대’를 맞이하여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에 대해 법과 제도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는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양한 삶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법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인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 주택공급, 과세제도 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하에서 1인가구는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1인가구에게 불리한 우리의 법현실이 특히 여

성 1인가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 소득 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건강의 취약성 등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 1인가구의 삶도 연령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일자리, 사회보장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에게 특히 불리한 법제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인가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1인가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인가구의 특성과 수요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바탕으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 · 고 · 문 · 헌

김영철·김연수·김인경,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1.

서울특별시(2012. 9. 13.), “서울시, 지자체 최초 ‘45만 여성 1인가구 삶’ 종합지원”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6. 9. 6.).

장민선,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이화젠더 법학』 제7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 주택시장의 변화, KB daily 지식비타민, 2013.